

613 발전노동자 대행진, 모이자 창원으로!

조건희 상임활동가, 기후정의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했다. 현재까지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태안 1호기가 폐쇄되었다. 2026년 태안 2호기·하동 1호기·보령 5호기까지 폐쇄 예정이었지만, 대체 발전소 건설 지연이나 중동전쟁 등을 이유로 차례로 늦춰졌다. 정부는 2038년까지 태안과 당진, 하동 1~6호기, 보령 5·6호기, 삼천포 3~6호기, 동해와 영흥 1·2호기 등 총 37기를 폐쇄하고 LNG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순차적·단계적·일방적 발전소 폐쇄, 불안한 노동자

폐쇄 흐름은 순차적이고 연속적이다. 여러 발전소가 차례로 폐쇄될 뿐 아니라, 한 발전소도 단번에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한 발전소도 조금씩 꾸준히, 수년에 걸쳐 폐쇄한다. 고용불안과 해고는 누적되지만,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기 어렵게 만든다. “이번에 몇 호기가 폐쇄되지만, 나는 다행히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당장의 안도감은 노동자들을 개별적, 수동적 위치에 머물게 한다. 그러는 사이 발전소 폐쇄와 해고는 노동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또한 폐쇄는 매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 및 대체 건설 계획과 전망을, 소수 국가 관료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라는 한 민중가요의 가사처럼 노동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변화에 적응할 여지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2025년 6월 2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정부와의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전국 발전소 노동자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용·

안전·폐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극적이었다. 발전 5사 자회사 및 2차 하청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폐쇄와 관련한 정보를 원청 발전 5사로부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각 48.8%, 45.6%) 발전소 폐쇄 이후 본인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자회사 66.4%, 1차 협력업체 85.8%, 2차 협력업체 89%로 하청 구조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높아졌다. 그동안 이미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해 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폐쇄가 곧 회사 정원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서로 눈치만 보는 거야. 누가 먼저 나가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같이 일했던 사람끼리 싸움 붙이는 거”라는 한 하청 노동자의 발언은, 발전소 폐쇄가 노동자 내부의 의자 뺏기 싸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고용불안은 단순히 불안감으로 그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수십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폐쇄를 앞둔 삼천포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이미 발생했다. 일터의 일방적 폐쇄는 노동자의 몸과 마음, 삶을 파괴한다.

발전소 폐쇄에 맞서 몸과 삶을 지키려는 투쟁

상황이 좋지는 않다. 김충현 노동자 사망 후 정부는 한전KPS 하청 노동자의 전원 직접고용·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보장 논의 기구 구성을 합의했지만, 일부 노동자들이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를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개발을 공공이 주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노동자들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민간 기업과의 경쟁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 여전히 공고한 다단계 하청 구조 속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매우 형식적·노동자 징벌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험 작업은 음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발전소 노동자들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라는 기치 아래, “414 기후정의파업”(2023), “330 충남노동자행진”(2024), “발전HPS지부 파업 투쟁”(2024), “531 대행진”(2025), “고(故) 김충현 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투쟁”(2025) 등을 펼쳐 왔다. 그리고 올해 6월 13일 창원에서 발전노동자 대행진(613 대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613 대행진은 6개의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스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 종식 및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소 폐쇄 국면 발전소 노동자 충고용 보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4법¹⁾ 제·개정 △고(故) 김충현 협의회 합의 이행

1) 공공 재생에너지법·정의로운 탈석탄법·한국발전공사법 제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개정

및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기후 위기, 전쟁 위기로 심화하는 차별과 불평등 철폐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구성이다.


613 대행진을 통해 진짜 사장 국가를 교섭장에 앉히자!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결국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국가와 발전 5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발전 5사는 폐쇄 일정을 분절하여 노동자들이 힘 모아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장 담벼락을 넘는 활동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 결정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두어서도 안 된다. 국가와 발전 5사를 움직일 수 있는 적극적 주체는 발전 비정규 노동자, 그리고 이와 연대하는 시민, 우리다.

오랜 투쟁 끝에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다. 직접적인 고용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면, 원청은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발전소 폐쇄를 결정하고 집행해 가는 국가와 발전 5사 역시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을 의제로 한 교섭에 나와야 한다.

발전소 폐쇄 국면에서 국가와 발전 5사가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수의계약 확보나 고용유지 등의 수세적 요구는 자본의 단계적, 분열적 폐쇄 전략 앞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원청의 일차적 책임을 정확히 물을 때, 고용유지도 가능하다.

민주노총 역시 원하청이 함께하는 7월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쟁취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613 대행진을 계기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위력 있는 총파업까지 함께 만들어가도록 힘을 모으자. 그럴 때, 진짜 사장을 협상장에 앉힐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과 대전, 충북 등 곳곳에서 창원으로 가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되고 있다. 진짜 사장의 책임을 강조하며 버스 타고 창원으로 모이자. 모여서, 정의로운 전환의 전망과 계획을 우리 손으로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자! 



▲ 2026.5.14.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개최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13 노동자·시민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사진 : 613 발전노동자대행진 조직위원회